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국가직 7급 시험은 난이도 조절을 위해 생소할 수 있는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되었고, 나머지 18문제는 평소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내용과 그간 기출되었던 문제들이 그대로 반복되었던 평이한 시험이었습니다. 합격선에 있는 수험생이라면 90점 이상이 예상되는 난이도입니다.

특히 시장실패(1번)의 원인, 정책유형론(2번), 정책의제영향요인(3번), 킹턴의 정책창 모형(4번), 직위 분류제(8번), 변혁적 리더십 vs 거래적 리더십(14번),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19번), 브레인스토밍(20번) 등의 문제는 기출문제에서의 빈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징계(6번), 수직적·수평적 연결기제(11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17번), 지방세 세목(10번) 등의 문제는 동형모의고사를 통해 충분히 대비했던 유형의 문제였으며, 위원회 유형(5번)과 공무원직장협의회(16번)는 Compass 기본서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어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법에 있는 국회의 결산과정(12번)이나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화책임관의 역할(18번)의 문제는 조금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였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뜯어보면 법령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느냐를 물었다기보다는 새로운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결산구조와 정보화책임관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으로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순발력을 물어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도 기출문제와 기본적 내용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점수를 획득하는데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7급 시험을 시작으로 올해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을 반복하는 학습법만이 합격을 위한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고, 이번 시험으로 실망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총론	1	재무행정론	2
정책론	4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조직론	4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4	지방행정론	3

01

- ### ① 규모의 경제

③ X-비효율성

② 정보의 비대칭성

④ 외부경제

해설

③ [X] X-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공공재	•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의 특징으로 '무임승차'문제 발생. 시장형성 × ⇨ 정부 직접공급
외부효과	• 경제주체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대가없이 다른 주체에게 손해나 이득을 가져다주는 효과 ① 외부경제 : 긍정적 효과(대중교통) ⇨ 과소공급 ⇨ 정부 보조금 지원 ② 외부불경제 : 부정적 효과(대기오염, 소음) ⇨ 과다공급 ⇨ 정부규제
독점 불완전 경쟁	• 독과점으로 인한 공정경쟁의 저해와 과소생산의 문제 발생 ① 독점 : 정부의 직접공급 또는 독점기업에 대한 규제 ② 과점(불완전 경쟁) : 담합 행위 등에 대한 규제
불완전 정보	•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 속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대리손실('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발생 ⇨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규제
분배 불평등	• 시장에서는 효율성을 중시. 공평한 소득분배는 보장 ×

참고

▶ ③

02

- ①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정책

③ 계층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해설 ① [○] 부배저채은 특허한 개이 기어체 조지 지여사히 드에 권리

해설

② [X] 그린벨트 내 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③ [X] 계층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재분배정책이다.

④ [X] 정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하는 정책은 추출정책에 해당한다.

정책의 유형

분배정책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의 배분 / 포크배럴, 로그롤링 현상이 발생 예) 수출 특혜 금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주택자금 대출, 국유지 불하, 농민을 위한 영농정보 제공 등
재분배정책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 / 계급대립적 성격으로 치열한 갈등 예) 누진소득세 제도, 영세민 취로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등
규제정책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 ① 경쟁적 규제 : 다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특정권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방송국 설립인가, 항공노선 허가 ② 보호적 규제 : 일반 대중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정책 예) 최저임금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구성정책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 /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영향이 없지만, 대내적으로 게임의 법칙발생,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나타냄. 예) 정부기관 신설, 선거구 조정 등
추출정책	정책적 목표에 의해 국민들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 예) 조세, 병역, 물자수송, 노력동원 등과 관련된 정책
상징정책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 및 국민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에 산출시키는 이미지나 상징과 관련된 정책 예) 88 서울올림픽경기, 2002 한·일월드컵경기, 남대문복원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190~191

▶ ①

03 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제가 사회적 유의성이 높을수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② 단순한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③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의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④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 해설** ① [○] 문제의 사회적 유의성 즉, 문제의 중요성이 높을수록 정책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② [○] 문제가 단순하고 분석수단의 선택이 기술적으로 용이하면, 정부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③ [○] 문제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사건, 위기 또는 재난은 정부의제화를 유발하는 점화장치로써 이 경우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④ [×] 정책문제가 관례화 혹은 일상화된 것이거나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정책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정책의제 형성의 영향요인

문제의 성격	① 정책문제가 발전의 가능성이 현격히 높은 것이거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게 될 문제는 정책의제화 가능성 높음. ② 영향을 받는 집단이 크고, 내용이 중요한 것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큼. ③ 정책문제가 관례화 혹은 일상화된 것이면 정책의제화 가능성 높음. ④ 정책 체제가 안정될수록 선례답습식으로 의제화됨. ⑤ 정책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해 가능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시 의제화 가능성 높음. ⑥ 일반대중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집단들에 의해 예민하게 쟁점화된 것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큼.
--------	--

정책담당 체제의 특성	① 의제설정권자가 적극적·능동적·고집쟁이일수록 자신의 뜻에 맞는 것만을 정책의제로 채택하려 함. ② 마음이 넓거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즐겨 듣거나 결단력이 적다면 외부 집단이나 부하 직원들의 뜻이 많이 가미된 의제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③ 상부기관의 지시와 통제가 잦고 엄할수록,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영향력이 큼. ④ 민주적 조직일수록 하의상달에 따라 하위조직원의 뜻이 의제설정에 많이 반영됨.
문제 인지자의 역량	① 문제를 인식하는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고, 조직적으로 응집되어 있어야만 영향력이 큼. ② 문제를 인식하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자원, 역량 있는 사람, 연출, 이용 가능성수단들이 많을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음. ③ 정책의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집단의 영향력이 크다면 의제화 가능성이 높음.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215

▶ ④

04 킹던(J.W.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Policy window theory)' 에서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독립된 흐름이 아닌 것은?

- ① 정보의 흐름(information stream)
- ②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 ③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 ④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해설 ②, ③, ④ [○] 킹던의 정책창 이론에서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독립된 흐름은 정책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stream), 정치적 흐름(political stream)이다.

① [×] 정보의 흐름은 정책창 이론에서 제시하는 독립된 흐름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256

▶ ①

05 위원회의 유형과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자문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② 조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③ 행정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④ 독립규제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해설 ①, ② [×], ③ [○]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해당한다.

④ [×]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361

▶ ③

06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③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④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해설 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임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②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금액의 1/8 감액하여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금액의 1/4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④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금액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금액의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549, 575

▶ ②

07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 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해설 ① [○]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1회계연도 동안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고 이를 검증하는 행위이다. 결산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②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국회법 제84조 제3항).
 ③ [○]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84조 제2항).

④ [X] 본회의 의장(예결위 위원장X)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동법 제84조 제6항).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행정론 p.651, 652

▶ ④

08 직위분류제의 출발에 영향을 미친 것을 모두 고르면?

- | | |
|---------------|-------------------------|
| ㄱ. 과학적 관리론 | ㄴ. 종신고용보장 |
| ㄷ. 보수의 형평성 요구 | ㄹ. 실적주의(merit system)요구 |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해설 직위분류제는 직위가 지니고 있는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거기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물을 임용하고 근무하는 제도이다.

ㄱ [O] 과학적 관리운동(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으로 정부개혁에 영향을 미쳐 정부 인사관리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켰으며, 직위분류제를 발전시켰다.

ㄷ [O]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수의 형평성(보수의 공정성)을 제고시키는 제도이다.

ㄹ [O] 직위분류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의한 임용이라는 실적주의의 요소를 전제로 한다.

I 직위분류제의 특징

- ① 개방형 총원체제, ② 미약한 신분보장(종신고용보장X), ③ 보상의 공정성(동일직무 동일보수-직무급), ④ 전문행정가의 중시로 인한 전직이나 전보 범위의 제한 ⑤ 권한과 책임의 한계 명확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493, 497

▶ ③

09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이결을 거쳐 시·도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을(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을(를) 구성할 수 있다.

㉠	㉡	㉢	㉣
①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정위원회	지방분쟁 협의체
② 지방자치단체 조합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정위원회	지방분쟁 협의체
③ 행정협의회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조정위원회	중앙분쟁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④ 지방자치단체 조합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조정위원회	중앙분쟁 행정협의회

해설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이결을 거쳐 시·도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동법 제165조).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동법 14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동법 제152조 제1항).

참고 compass 행정학 지방행정론 869~871

▶ ④

10 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국가가 납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 ㉡.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 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 ㉢.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ㄷ

해설 ▶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 중 목적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두 가지이다. 이 문제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다.

ㄱ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은 지방소비세이다.

ㄴ [○]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ㄷ [×]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지방소득세이다.

ㄹ [○]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이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참고 ▶ compass 행정학 지방행정론 p.824

▶ ④

11 조직관리에서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가 아닌 것은?

① 계층제

② 규칙과 계획

③ 수직정보시스템

④ 임시작업단(task force)

해설 ▶ ①, ②, ③ [○] 수직 연결기제에는 계층제, 규칙과 계획, 계층직위의 추가, 수직정보시스템 등이 있다.

④ [×] 수평적 연결기제에는 정보시스템, 직접접촉, 임시작업단,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팀 등이 있다.

참고 ▶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333, 334

▶ ④

12 행정통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실제 행정 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ㄴ.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기준의 확인

ㄷ. 통제주체의 시정조치

ㄹ. 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ㄴ → ㄱ → ㄹ

해설 ▶ ② [○] 역동적이고 순환적인 통제과정에 포함되는 기본적 요소 또는 활동단계는 ㄴ. 통제기준의 확인 ⇨ ㄱ. 정보수집 ⇨ ㄷ. 평가 ⇨ ㄹ. 시정행동이다.

ㄴ. 통제기준의 확인하는 단계의 기본적 과제는 통제기준이 무엇이며, 그것이 피통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피통제자는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ㄷ. 통제기준을 확인한 다음에는 통제기준에 대응한 실천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한다.

ㄹ. 평가의 단계에서는 통제기준과 실적에 관한 정보를 평가하여 기준과 실적의 차질유무를 확인하고 시정의 필요성에 관한 결정을 한다.

ㄷ. 평가의 결과에 따라 통제주체는 시정행동을 한다. 시정행동의 결과는 통제중추에 환류된다.

▶ ②

13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 ② 직무 확장(job enlargement)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 ③ 고위관리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 ④ 직무 풍요화(job enrichment)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해설 ① [X]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는 높을 수 있지만, 수직적 전문화는 낮은 것이 효과적이다.

Ⅰ 과제의 성격과 직무전문화

구 분		수평적 전문화	
		높음	낮음
수직적 전문화	높음	비숙련직무(단순직무)	일선관리직무
	낮음	전문가적 직무	고위관리직무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332 / 인사행정론 p.514

▶ ①

14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목표를 달성한다.
- ② 부하의 변화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하를 리더로 키운다.
- ③ 부하의 자기실현과 존중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 ④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해설 ① [X] 부하의 욕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 거래적 리더십 vs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초 점	일반 관리층	최고 관리층
관리전략	합리적 교환관계와 통제 하급욕구의 충족	비전공유를 통한 내적 동기유발 고급욕구의 만족
변화관	안전지향(폐쇄적)	변화지향(개방적), 환경적응지향
조직구조	고전적 관료제	탈관료제(구조의 융통성 중시)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론 p.391

▶ ①

15 제도화된 부패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부패지향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 ②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 ③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표방
- ④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

해설 ④ [X] 제도화된 부패란 부패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 행정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이 되고 바람직한 행동규범은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부패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조직의 보호를 받고, 공식적 행동규범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제재를 받게 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565

▶ ④

16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 ① 5급 일반직 공무원
- ②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공무원
- ③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④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해설 ②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다.

①, ③, ④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행정론 p.554

▶ ②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지방자치법 제168조 제1항).

② [○]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안전행정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동법 제163조 제1항).

③ [×]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동법 제171조 제1항).

④ [○]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동법 제172조 제1항).

참고 compass 행정학 지방행정론 p.853, 854, 862

▶ ③

18 「국가정보화기본법」상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가 아닌 것은?

- ①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 ②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 ④ 「전자정부법」 제2조 제 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해설 ①, ②, ④ [○]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 7. 정보화 교육
-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정보화책임관×)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

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1항).

▶ ③

19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 ②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bottom-up)방식이다.
- ③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미래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해설 ②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재정당국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분야별·부처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각 부처는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의 재원을 배분하는 하향적(Top-down) 예산편성제도이다.

■ 기존 예산제도 vs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

	기존예산제도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시계	단년도 예산편성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 편성
흐름	상향식(Bottom-up)	하향식(Top-Down)
초점	투입지향	성과지향(성과관리체계와 연계)
행태	부처별 과다요구 중앙예산기관의 대패식 삭감	한도액의 설정으로 부처별 과다요구 및 정치적 행태가 축소(다만, 국회심의과정에서의 증액은 부처별 한도액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국회심의 과정에서의 예산전략이 더욱 적극적이 됨)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행정론 p.684

▶ ②

20 집단적 문제해결의 전통적 방법을 수정한 대안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 -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들을 종합·정리하는 방법이다.
-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지양한다.
- ③ 변증법적 토론(dialectical inquiry) -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
- ④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method) - 개인들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 다음,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해설 ② [×] 브레인스토밍은 오스본에 의해 창안된 집단토의 기법으로서 직접적·대면적 접촉을 유지하되, 즉흥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하에서 조직구성원 및 전문가의 창의적 의견이나 독창적인 사람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직접적인 대면 접촉 토의를 통하여 창안하는 주관적, 질적 분석

기법이다.

■ 브레인스토밍

비판엄금	타인들의 아이디어를 평가·비판·간섭하지 않음으로서 자유로운 상상을 허용
자유분방	이상적이거나 급진적인 아이디어도 허용
질보다 양	좋은 아이디어보다 많은 아이디어
대면적 토론	면대면 토론을 원칙으로 하여 최근 전자메일을 통한 전자브레인스토밍도 활용됨
결합개선	다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론 p.231, 234

▶ ②